

#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107호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 방송통신사무소장

-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2023.09.14. ~ 2023.09.27.(14일)
-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곽미경	66. **. 23.	0178200274100008842	₩31,860,000	충북 제천시 내도로 59길 31
2	길성우	64. **. 17.	0178200274100008843	₩31,860,000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3	유한회사 동원	151114-0000825	0178200274100000152	₩53,100,000	충북 충주시 대가미 8길 20
4	엄장민	80. **. 30.	0178200274100000191	₩18,000,000	충북 진천군 진천읍
5	남기열	64. **. 15.	0178200274100008240	₩31,860,00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6	권창혁	69. **. 01.	0178200274100008854	₩5,31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7	유동열	61. **. 17.	0178200274100008858	₩31,860,0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	이현욱	67. **. 13.	0178200274100008859	₩22,302,000	충북 음성군 맹동면
9	이종환	69. **. 09.	0178200274100008865	₩22,302,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10	김준원	76. **. 28.	0178200274100003466	₩3,54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11	박재수	73. **. 12.	0178200274100008832	₩31,860,000	대전시 동구 성동로 65
12	최중필	83. **. 01.	0178200274100003467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13	김사익	68. **. 17.	0178200274100008855	₩47,79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4	이갑순	54. **. 07.	0178200274100008845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